기획예산처, SOC사업 82% 상반기 집행 (2004. 1. 3)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및 수출·중소기업 지원분야 예산의 82.9%를 상반기에 배정,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186조 228억원의 올해 예산 중 63.7%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54%의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의 '2004년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예산의 62.0%, 자금의 52.0%를 상반기에 배정했던 것보다 각각 1.7%포인트,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증가한 82.9%를 배정, 투자사업 관련 계약 체결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중 건교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3,000억원과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70억원도 1/4분기에 배정해 조기에 공사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업특별회계 중 철도사업특별회계 3,485억원 가운데 3,317억원을 1/4분기에, 나머지 168억원을 2/4분기에 각각 배정키로 했다. 계속비 사업의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운데 증액된 도로계정 768억원도 1/4분기에 배정, 기간국도 6~10차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국세수입과 작년 이월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되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단양군 석회석·신소재산업 메카로 (2004. 1. 5)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일대가 석회석 및 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돼 군의 지역 전략사업 전초기지로 바뀐다. 단양군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석회석 신소재 산업 단계별 목표를 설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단계인 올해는 재정경제부로부터 매포읍 일대에 대한 '단양 석회석 특화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연구소 등 건물 신축에 들어가며 2단계인 내년에는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 3단계(2006년)는 신소재 기업체 입주와 가동에 들어가고 4단계(2007~2008년)는 신소재 기업체 정착화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15억원을 투입, 매포읍 우덕리와 매포리 2만 4,468m²의 터에 연건면적 1,650m² 규모의 매포 석회석 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2008년까지 추가로 50억원을 들여 옛 도담초등학교 터 2만 3,478m²에 충북 테크노파크 단양분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15억원을 들여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을 건립하고 제지용 침강성 탄산칼슘 상용화 기술 개발과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도시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혼합물의 고체연료화 전처리 및 시멘트 원료화 기술 개발사업 등 중앙 정부 연구과제도 추진하게 된다.

전경련, 1분기 산업경기 양극화 지속 (2004. 1. 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1/4분기(1~3월) 산업경기가 반도체, 전자,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은 수출호조세를 유지하고 공작기계, 건설, 시멘트, 섬유 등은 악화돼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20개 주요 산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 1/4분기의 전반적인 산업경기는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나 산업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 조선, 기계, 전기, 제당 등 6개 업종이 전년보다 호전되고 자동차, 타이어, 철강, 석유, 석유화학, 화섬, 방직, 제지, 원양어업, 전력 등 10개 업종은 전년동기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작기계, 건설, 시멘트, 섬유 4개 업종은 전년보다 악화돼 전반적으로 산업경기는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생산은 반도체, 전자, 기계, 석유화학, 전기, 제당 등 6개 업종이 전년동기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 공작기계, 섬유, 시멘트 등 4개 업종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는 각각 40.8%, 11.4%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과 섬유는 각각 11.3%와 7.8%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업종별 대조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반도체, 전자, 기계, 방직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회복이 기대되나, 공작기계, 섬유, 자동차 등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출은 지난해 한해 지속됐던 대외 불안요인의 완화, 세계경제 및 IT경기의 완만한 회복, 중국의 고성장, 내수부진 만회를 위한 기업의 수출확대 노력 등으로 인해 과잉 생산설비 문제를 겪고 있는 시멘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보합 내지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경련은 그러나 "반도체, 전자 등 주력업종의 수출호조세 유지로 산업경기는 전년수준을 유지하나 건설, 공작기계, 섬유, 시멘트 등 업종의 생산은 전년동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국도 등 47곳 확·포장 연내 착공 (2004. 1. 8)

건설교통부는 올해 3번 국도 경기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등 국도 36개 구간과 경기 고양시 관산~원당동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11곳 등 모두 47곳(총연장 384.2km)의 확·포장 공사를 착공한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비 1,231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착공되는 주요 국도는 3호선 광주~이천(17.9km), 17호선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매산리(9km), 87호선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포천읍 신읍리(6km), 46호선 강원 춘천시 신북~북산면(10.7km), 6호선 강원 강릉시 연곡~두능(13.6km) 등이다. 3번 국도는 충북과 경기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광주~이천 구간이 오는 2010년까지 4차로로 확장되면 주변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확·포장공사가 착수되는 국도는 2008~2010년 모두 완공된다. 한편, 건교부는 국도 확·포장 및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0년까지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수도권 레미콘 5,800만m^3 출하 (2004. 1. 12)

지난해 수도권의 레미콘산업은 생산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총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레미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표산업와 쌍용양회 등 114개사 178개 공장에서 출하한 레미콘은 민수 5,352만m^3와 관수 487만m^3 등 모두 5,839만 1,011m^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의 6,000만m^3 출하에 비해 2.3%가 감소한 것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193만m^3, 2/4분기 1,631만m^3, 3/4분기 1,403만m^3, 1,592만m^3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하량 감소는 작년 1월과 2월의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년의 다세대·다가구 신축붐과 같은 대형 수요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3월 이후 출하량 증가세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장신설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설이 크게 확대되면서 업계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4/4분기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경쟁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업계는 추론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작년에 수도권의 레미콘 공장수가 15개나 늘어난데다 대형 레미콘사 등이 기존 공장의 증설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업계의 평균 공장가동률과

출하량의 저하로 이어졌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 총생산 75% 해상운송체제 구축 (2004. 1. 13)

동양시멘트가 총생산량의 75% 이상인 연간 688만톤 규모의 연안 운송체제를 구축했다. 동양시멘트는 13일 울산 INP중공업에서 연간 72만톤을 수송할 수 있는 6,500톤급 벌크시멘트 운반선 '세양호' 진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상운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세양호는 선체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를 6.2m로 유지할 수 있다"며 "수심이 낮은 포항과 여수 등의 항만에서도 자유롭게 입출항이 가능, 운항효율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생산공장이 삼척항 및 북평항과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을 활용해 그동안 부산, 울산, 창원, 목포, 군산, 인천 등 주요 수요지 연안지역에 대단위 시멘트 유통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이같은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송비가 다른 운송수단의 50% 수준에 불과한 해상운송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며 "이번 세양호 투입으로 총 10척의 벌크선박을 보유, 국내 최대의 연안수송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태평양시멘트, 콘크리트 두께 측정기술 개발 (2004. 1. 15)

태평양 시멘트는 14일, 콘크리트의 두께를 비파괴로 고정도로 측정하는 검사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콘크리트 표면을 두드려서 그 충격파(Shock Wave)가 내부에 전해져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두께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사 진단을 취급하는 자회사인 크레오가 실용화한다. 강구(鋼球)로 콘크리트 표면을 강하게 두드리면 그 충격탄성파가 콘크리트의 이면에 달한 후에 반사하여 돌아온다. 콘크리트 표면에 설치한 센서로 이 탄성파를 모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두께 10~30c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는 최대 3mm의 오차로 몇 초만에 측정한다.

KOTRA, "한국기업 중국투자 성공률 기대이하" (2004. 1. 16)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중 절반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지만 진출 후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투자를 돕기 위해 16일 펴낸 '중국투자 실무 가이드'에서 "우리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 45.6%는 중국에 몰려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현지 진출 후 경영환경이나 투자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KOTRA는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가운데 4분의 3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자본, 기술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회사가 급증하고 회사의 분리, 통합, 재편성이 잦은 중국에서는 유령회사에 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업체의 실존 여부와 법인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KOTRA는 설명했다. 또 중국은 외화의 은닉, 탈세 등을 단속하기 위해 1999년부터 외환관리를 한층 강화해 서비스 거래 및 기술계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계약내용이 모호할 경우, 외화송금이 안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일본, 2003년 시멘트 판매 대폭감소 (2004. 1. 24)

2003년의 국내 시멘트 판매량이 1971년이래 32

년만에 6,000만톤대를 밑돌았다. 일본시멘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내 메이커의 판매실적(수출 제외)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5,921만 1,806톤이었다. 공공사업의 삭감 및 민간 설비투자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피크였던 1991년(8,467만 4,000톤)에 비해 30% 감소한 수준이다. 판매량의 감소는 3년 연속이다. 생산량도 동 3.4% 감소한 7,378만 9,396톤으로 피크였던 1996년(9,956만 6,000톤)에 비해 26% 감소했다. 메이커 각사는 회전가마의 정지 등 생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출량은 전년대비 16.55% 증가한 960만 8,762톤으로 3년 연속 전년실적을 상회했다.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벌크화율 90% 육박 (2004 2. 9)

시멘트 출하형태 중 포장시멘트의 비중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벌크출하율이 9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 건설현장에도 레미콘을 통한 타설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벌크화율이 95%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87%대에 머물던 벌크화율(벌크출하량/총출하량×100)이 지난 2002년 89%대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90%에 이른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벌크수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포장시멘트에 비해 공장출하와 수송, 하역 등의 작업이 빠르고 편리한 이점이 있는데다 레미콘업체 등 주요 수요처들이 BCT를 통한 구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대형건물이나 고층건물은 물론 소형현장에까지 레미콘타설이 일반화되는 등 시멘트 소비형태가 변화하는 것도 벌크화율 상승에 일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체 관계자는 "소형현장이라도 포장시멘트를 구매, 현장 비빔을 거쳐 타설할 경우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건축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에서 공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슬럼프치를 상향하는 등 품질향상이 이뤄진 것도 벌크출하 증가에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0년 91%이던 벌크화율이 2002년에 95.5%까지 확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업계의 벌크화율도 4~5년 이내에 9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전체 4,472만톤의 출하량 가운데 3,930만톤을 벌크로 출하, 벌크화율이 87.9%를 기록한 이후 2000년 88.9%, 2001년 88.7%, 2002년 89.1%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거쳐야 가능 (2004. 2. 13)

오는 7월 21일부터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가 도입돼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월 1차례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월 20일 이전부터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2005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된다. 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보유차량을 포함 500대 이상의 화물차를 확보해야 하고 화물의 배정, 결제시스템을 포함, 화물운송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부터는 화물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이 기존 5대에서 1대로 완화돼 업차주들도 개별 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원자재 먹는 하마, 세계 시멘트 절반소비 (2004. 2. 23)

중국은 원자재 시장의 '배고픈 용'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9일)를 통해 전세계 원자재를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을 '배고픈 용(Hungry Dragon)'이라 묘사하며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 주요 원자재의 수요를 이끌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원자재 독식 현상은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멘트 생산의 50%를 소비했다. 석탄과 철강에 대한 수요도 세계 생산량의 30%와 36%를 각각 차지했다. 비철금속인 구리와 니켈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15%와 50% 이상 급증했으며 석유 수입도 지난해 30% 늘어 미국에 이어 세계2대 소비국으로 급부상했다. 이같은 원자재 싹쓸이 현상은 중국 경제가 지난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6년만에 최고 성장률(9.1%)을 보였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수요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리오틴토와 BHB빌톤 등 광산업체 실적을 잇따라 상향조정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산정하는 금속가격 지수도 2001년 9월 최저점에 비해 75% 상승했다. 중국은 또 2015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최대 조선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 중국 최대 조선소인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는 이미 25개 중대형 벌크선 주문을 체결했으며 2015년이 되면 상하이에 세계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해상 운임은 전세계 원자재가 중국으로 몰리면서 2년새 6배나 오르며 선박 산업에 최고 실적을 안겨주고 있다.

건축허가 6개월 연속 감소 (2004. 2. 25)

건축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올해 들어서도 큰폭으로 줄어드는 등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674만 2,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2만 1,000m²)에 비해 4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인 지난해 12월(1,359만 8,000m²)의 절반에 머무는 수준이다.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에 12.3%가 줄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월에 51.5%, 10월에 27.2%, 11월에 12.5%, 12월에 4.9%가 각각 줄어드는 등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면적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의 경우 167만 7,000m²가 허가되는데 그쳐 60.1% 감소했으며 상업용도 193만 5,000m²로 53.1%가 줄었다. 공업용은 148만m²로 10.7%가 줄어 지난해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문교·사회용도 58만 3,000m²로 9.3%가 감소했다. 반면 농수산·공공용 등 기타는 106만 7,000m²의 실적을 기록해 19.8%가 늘어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342만 5,000m²로 40.4%, 지방은 331만 7,000m²로 44.9%의 감소율을 각각 보였다. 한편 1월중 건축물 착공면적은 460만 7,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9만 7,000m²에 비해 24.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공, 아파트 10만가구 건설키로 (2004. 2. 28)

주택공사는 올해 10만가구의 아파트를 건설(사업승인)하고 5만 3,000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를 발주키로 했다. 또한 택지개발부문에서는 파주, 운정 등 10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성남, 판교 등 12개 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까지 받을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주공은 운영계획에서 아파트 건설부문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10만가구의 아파트를 건설(사업승인)키로 했다. 이중 국민임대가 8만가구를 비롯 공공임대 3,000가구, 공공분양 1만 7,000가구이다. 주공은 당초 잠정운영계획안에서 아파트건설 규모를 8만 5,000가구로 잡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물량을 늘려 이처럼 1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건설공사 발주물량은 67개 지구에 5만 3,000가구로 확정했으며 이중 국민임대 3만 9,000가구, 공공임대 2,700가구, 공공분양 1만 900가구 등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발주물량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공은 특히 상반기에만 2만 6,000여 가구를 발주키로 했으며 이날 운영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아파트공사 발주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

동양, "수익 극대화 역점" (2004. 3. 2)

동양시멘트는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목표를 수익성 극대화에 맞추는 등 내실경영을 펼치기로 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2004년을 '최고를 향한 지속적인 역량 구축의 해'로 정하고 매출액 6,276억원, EBITAD(이자 및 세금, 감가상각비지급전 이익) 2,061억원을 달성키로 했다. 또 수익극대화에 경영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채권관리 강화,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경쟁력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노영인 사장은 "금년은 대체재 공급증가, 수입시멘트 물량 증가, 내수부진 등 경기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최대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원자재 값 폭등에 '속앓이' (2004. 3. 2)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 가격 급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주연료인 유연탄 값이 폭등하면서 심각한 원가 압박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제품 값에 반영할 길이 만만치 않아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탄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서 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연말 톤당 30달러 미만이던 유연탄 값이 40달러를 돌파했다"며 "유연탄이 시멘트 생산원가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메가톤급"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공비행을 계속하는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라며 "한국전력이나 포스코에 비해 수요량이 크지 않은 시멘트 업체들로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선을 잡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일본, 민간건설 투자부진 계속 (2004. 3. 5)

올해 일본 민간기업들의 건설투자는 대부분 작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물가조사회가 2,018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7.0%가 건설투자를 늘릴 계획이고 7.6%는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투자확대 예정인 기업은 제조업이 5.0%로 1.3%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은 7.7%로 3.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3%가 투자액을 20% 이상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조업은 2.7%, 비제조업은 4.9%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20% 이상 줄인다고 답한 기업은 제조업 5.9%, 비제조업 4.8% 등 전체로는 5.2%에 달했다. 투자규모별로는 10억엔 이상 늘리겠다는 응답이 8.4%였고 이중 투자액을 20% 이상 증액하려는 기업은 4.9%

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3월 설비투자 중 건설투자는 총 1조 6,947억엔으로 작년 동기대비 2.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주택 건축이 1조 1,379억엔으로 5.1% 줄어든 가운데 사무소·점포가 6,699억엔으로 5.1%, 공장·창고가 2,777억엔으로 16.9%, 기타시설이 1,902억엔으로 3.8%가 각각 감소했다. 토목은 5,195억엔으로 1.6%, 주택은 373억엔으로 20.8%가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427억엔으로 14.8% 줄었고 비제조업은 1조 3,520억엔으로 1.0% 늘었다.

건교부,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 추진 (2004. 3. 5)

건설교통부는 원자재난이 심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따라서 최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계약당시에 비해 20% 이상 급등할 경우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국가계약법상 총계약금액 대비 5% 이상이 상승해야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철근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이상급등 할 경우 가격상승분을 시공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달청 가격기준 대신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하고 건설자재 공급차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공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달청 가격기준은 실거래가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멘트·철강산업 성장률 천문학적 (2004. 3. 10)

세계시장을 강타한 '원자재난'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의 고속성장에 대한 중국 내부의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회의도중 기자회견을 통해 철강과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산업의 급속한 투자 성장률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강조하면서 '과열투자'의 우려를 전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마카이 주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철강업 투자는 전년대비 96.6% 성장했으며, 전해 알루미늄은 92.9%, 시멘트는 121.9%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그는 "이처럼 일부 산업에 투자가 편향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구조의 불합리가 급속히 드러나는 것으로, 에너지 자원문제가 산업구조를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자원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카이 주임은 이어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고속경제성장관리에) 실패하면 경기가 붐을 탄데 이어 급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중국 당국이 최근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외의 목소리를 수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일, 레미탈사업 강화 (2004. 3. 16)

한일시멘트가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레미탈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금년에 레미탈사업부문 매출을 전체의 15%인 90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5년내 이보다 2

배 이상으로 늘려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기능만 갖고 있던 기존의 중앙연구소를 연구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연구 및 사업개발(R&DB)형 연구소로 업그레이드, 보수·보강부문의 기술개발과 영업부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기로 했다. 특히, 레미탈을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일시멘트는 이미 일반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한 셀프용(DIY) 제품으로 일본 몽골 등에 수출한 바 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건축자재인 드라이몰탈을 도입해 국내 건설시장에 품질과 전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레미탈이라는 통합 브랜드 아래 40여종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6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레미탈 외에도 신규사업을 추진해 향후 10년내 건축자재부문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추진 (2004. 3. 18)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기관에 재생골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건교부는 재생골재 활용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정밀 연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축폐기물에서 추출하는 재생골재는 현재 성토 및 매립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재생골재를 일반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우선 개발한 뒤 주요 구조물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시 재생골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말까지 친환경 골재채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해사채취 관련 중복규제를 단일화하고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2의 골재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재생골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국가물류시스템 본격 구축 (2004. 3. 18)

정부는 작년에 발생한 물류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국가 물류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물류기업 유치 등을 통한 국가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인 물류체계 협력단을 공동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양부 해운물류국장과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협력단을 구성하고 총괄반, 인프라구축반, 위기대응반 등 3개 실무반으로 하여금 국내 물류산업 육성, 해외 물류기업 투자유치 등을 공동 추진토록 했다. 또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역할도 협력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작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의 재발을 예방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올들어 유연탄 수입가격 폭등세 (2004. 3. 20)

시멘트 등 국내 유연탄 수요업계는 유연탄 국제시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물량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호주와 중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캐나

다. 러시아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유연탄은 모두 1,108만 2,305톤 4억 7,015만 2,000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작년 같은기간 1,089만톤 3억 7,151만 달러에 비해 물량기준으로는 1.7% 증가에 그쳤지만 금액기준으로 26.6%가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유연탄값 인상폭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유연탄 평균수입가격은 톤당 34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42.4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국가별로는 호주산 유연탄이 449만 8,000톤(1억 8,998만달러)이 반입됐으며 이어 중국 303만 6,000톤(1억 2,340만달러), 인도네시아 219만 1,000톤(9,034만달러) 순이었다. 이 같은 가격앙등은 국내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산업전반에 생산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값 상승으로 전력비까지 인상되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건설기초자재에도 파장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상의, 2분기도 건설경기 '먹구름' (2004. 3. 22)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취합해 20일 내놓은 '주요 업종의 1/4분기 실적 및 2/4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중 건설수주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4분기 수주감소폭으로 예상되고 있는 11.3%의 두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상의는 "작년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돼 온 민간주택경기 위축 경향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격히 불거진 건자재 품귀 현상과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이 겹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2/4분기에는 SOC 집행예산이 축소되는 데다 탄핵정국과 총선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마저 어려워 건설업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 관계자는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공사 조기발주 등의 호전 요인도 다소 있으나 최근 건설업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원자재 파동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가 관건"이라며 "후분양제,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도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 SOC사업 적극 추진 (2004. 3. 23)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 및 지역 SOC 건설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투자재원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운용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구분,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의 특성과 우선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개발사업 계정을 통해 낙후한 농어촌 개발 및 지역 SOC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평가안을 확정, 실사작업을 벌인 뒤 낙후지역을 선정해 고시할 방침이다.